

참여정부 5년 외교성과

국.민.과.함.께.세.계.로.미.래.로.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국 . 민 . 과 . 함 . 께 . 세 . 계 . 로 . 미 . 래 . 로 .

참여정부 5년 외교성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제1장.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방향

제2장. 참여정부 외교정책 분야별 성과

1.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 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노력
- 나.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기반 구축
- 라. 주변4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 (1) 한·미관계
 - (2) 한·일관계
 - (3) 한·중관계
 - (4) 한·러관계

2. 외교 지평의 확대와 심화

- 가.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 (1) 정상외교의 확대(2003-2007)
 - (2)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나. 외교 다변화·다원화 추진
 - (1) 동남아 외교
 - (2) 서남아·대양주외교
 - (3) 유럽외교
 - (4) 아프리카·중동외교
 - (5) 중남미외교

3. 국제적 기여 증대와 국가위상 제고

- 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기여
- 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확대
 - (1) 대외원조 지속 증대
 - (2) 국제기구 분담금 증대
- 다. 주요 국제기구 진출
- 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 전개

4.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 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능동적 참여
- 다.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
- 라.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및 환경외교 추진

5.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 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구축
- 나. 재외동포의 권익증진
- 다. 국민과의 대화 확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참여정부 5년 외교성과

국.민.과.함.께.세.계.로.미.래.로.



참여정부
외교정책
백서

제1장.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방향

제2장. 참여정부 외교정책 분야별 성과

1.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 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노력
- 나.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기반 구축
- 라. 주변4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 (1) 한·미관계
 - (2) 한·일관계
 - (3) 한·중관계
 - (4) 한·러관계

2. 외교 지평의 확대와 심화

- 가.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 (1) 정상외교의 확대
 - (2)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나. 외교 다변화·다원화 추진
 - (1) 동남아 외교
 - (2) 서남아·대양주외교
 - (3) 유럽외교
 - (4) 아프리카·중동외교
 - (5) 중남미외교

3. 국제적 기여 증대와 국가위상 제고

- 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기여
- 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확대
 - (1) 대외원조 지속 증대
 - (2) 국제기구 분담금 증대
- 다. 주요 국제기구 진출
- 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 전개

4.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 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능동적 참여
- 다.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
- 라.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및 환경외교 추진

5.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 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구축
- 나. 재외동포의 권익증진
- 다. 국민과의 대화 확대







참여정부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주변 4국 등 우방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제1장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방향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 재발로 인한 심각한 안보 불안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으로 우리의 안보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제테러와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제기되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태세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한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우리 경제는 21세기 들어 후발 개도국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엔진을 창출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급증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활동 증가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와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숭한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여 국가도약의 전기로 삼고자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 외교 지평의 확대와 심화 ▲ 국제적 기여 증대와 국가위상의 제고 ▲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외교를 주요 목표로 하여 우리의 국익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우리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①북핵불용 ②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③우리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북핵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협력,

북한과의 의사소통을 추구하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북핵 위기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ASEAN+3 참석자 출국하는 노 대통령 내외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역동적이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관계로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함께 기존의 강대국, 주변국 위주의 외교틀을 넘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외교의 다변화, 다원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래 27차례에 걸쳐 44개국을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전방위 외교를 신규 시장 개척,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확보 등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인 BRICs 등과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질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의 약소국 현실주의라는 소극적 외교를 극복하고,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가이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적 발전 국가로서 성숙한 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고 평화유

외교 지평의 확대와 심화

국제적 기여 증대와 국가위상의 제고

지활동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국제기구의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을 배출하였으며,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 등 주요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전파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 등 스포츠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참여정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 하에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 대륙별 거점국가와 ASEAN 9개국 신흥시장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 선진경제권을 포함한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습니다.

한국의 Global FTA Network



또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차원의 DDA 특별성명 채택을 주도하는 한편, 외국의 우리 상품 수입규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통상마찰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통상국가 실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편,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환경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략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유사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참여정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해외 여행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해외활동 편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의 24시간 영사콜센터 및 신속대응팀 창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개별 영사서비스 및 재외국민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체계화한 ‘통합 영사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중전의 재외동포정책은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지화’에 집중되었으나, 참여정부는 이와 더불어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한인의 날’ 제정,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활성화와 재외동포재단의 역량 강화, 그간 재외동포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러시아, CIS 지역 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민족교육과 한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존경받는 **선진 중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 ▲외교지평의 확대
▲자원·에너지 확보 외교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정상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2장

참여정부 외교정책 분야별 성과

1.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노력

참여정부는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① 북핵 불용, 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③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3대 기본 원칙하에 관련국에 대한 설득과 창의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6자회담을 제도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9월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와 2007년 10월 제6차 6자회담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북핵으로 조성된 위기국면을 6자회담을 기본 틀로 하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9.19공동성명 채택을 축하하는 제4차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 (2005.9.19, 베이징)

【 9.19 공동성명, 2.13 및 10.3 합의 요지 】

	주요 내용
9.19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 의사 부재 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성 -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 북·미와 북·일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한국은 2백만KW 전력공급 제한 재확인 ■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관해 협상 ■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
2.13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내 ①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②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중 중유 100만톤(초기 5만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10.3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일·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recalling) ■ 중유 100만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나.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2002년 10월 대두된 북한 핵문제에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증진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번영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각종 양자 및 다자 계기에 평화번영 정책과 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및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유도 등 외교적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남북대화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3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정상회담 1회, 대통령 특사 방북 4회, ARF 계기 외 교장관회담 3회, 장관급회담 12회, 차관급회담 1회, 장성급 군사회담 6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의의 9회 등 총 140회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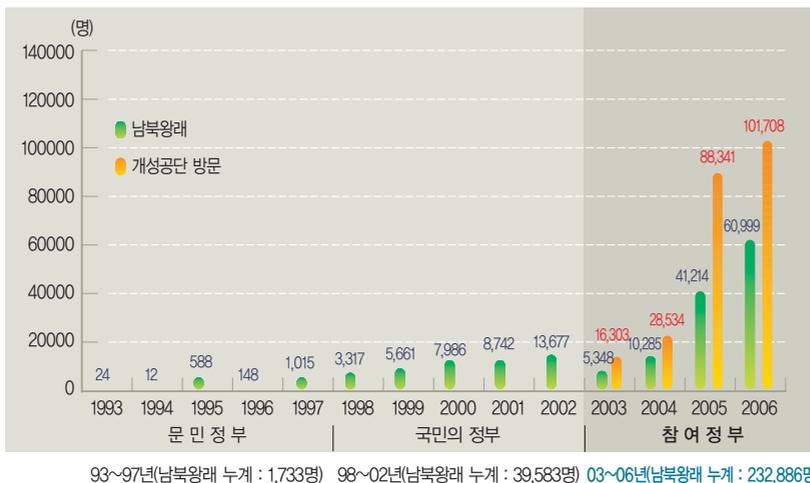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10.4, 평양)

특히 참여정부는 북한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 남북관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위한 양 정상 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천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였으며, △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길을 개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고위인사의 주요국 파견 및 주한외교단에 대한 브리핑 등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남북교류 2004년 7월 8일 김일성 10주기 민간 추모 대표단의 방북 무산, 2004년 7월 21일 북한인권법의 미 하원 통과, 2004년 대규모 탈북자 입국,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06년 10월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꾸준히 지속되어 2003년부터 2007년 7월간 남북간 왕래 인원은 총 3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간 왕래 인원 현황^①



① 경제, 사회문화 교류, 대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계기 남북 왕래 인원수로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왕래 인원은 제외

남북경협 참여정부는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멘텀 유지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경

이러한 노력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거행한 이래 현재 26개 기업에서 17,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3년 9월 육

로관광이 정례화된 이래 2007년 6월 1일 내금강 관광도 시작되었으며,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경우 2007년 5월 17일 분단 반세기만에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에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 시험운행을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평화번영정책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ASEM, APEC, ASEAN+3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등 각종 다자회담 계기와, 미·일·중·러를 포함, 다양한 정상, 외교장관 및 고위급 양자회담 계기에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 및 자재가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이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문제 관련 각국과 FTA 협상과정에서 협의하는 등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유도 우리 정부는 인도적 고려와 더불어 동포애적 차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간 190만톤의 식량과 16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및 2007년 8월 북한 수해 등 발생시 대북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자 차원에서 세계식량기구(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약 9,400만불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공여국들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북한 인력 연수 및 교육사업등의 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기반 구축

참여정부는 동북아 지역내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불신 해소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2003년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통상·재무·환경 등 14개 협력 분야에서 3국간 협의체를 발족키로 하였으며, 2004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선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향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협의체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구성된 바, 제1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2007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데 이어 제2차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2007년 8월 20~21일간 개최되어 ▲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원칙과 ▲ 6개국이 추진 가능한 신뢰구축 방안이 적극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의 실현방안으로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동북아지역 평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SEAN+3 계기 한·중·일 정상회담중인 노무현대통령, 고이즈미 일본총리, 원자바오 중국총리 (2004.11.29,비엔티엔)

라. 주변4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1) 한·미 관계

참여정부 출범 이후 8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관계는 국제 환경과 각국의 국내외적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관계를 발전·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번영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기반으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오랜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양국간 현안들을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관계는 보다 균형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1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양국관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및 동맹으로서 양국관계의 지평과 목표 확대를 위하여 2006년 1월에 한·미 외교장관간 전략대화가 최초로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양국간 전략대화가 견실히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전통적인 정치·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까지 넓혀 동반자 관계를 발전·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정상회담
(2005.11.17, 경주)

(FTA)에 서명하고 동 협정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한·미간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이는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타결 대국민담
화(2007.4.2, 청와대)

② 2007.8.3 부시 미 대통령이 비자거부를 완화 및 신규 보안 요건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VWP 현대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동 개정법안이 확정, 발효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비자거부율 요건이 완화되는 등 한국의 VWP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참여정부는 한국이 조속한 시일내 VWP에 가입 추진중

또한, 사회·분야 분야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조기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국 국민간 상호 인식 제고와 한·미관계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②

그 밖에, 참여정부는 대테러전쟁, 이라크 및 아프간 재건 지원, 군축·비확산, 민주주의 확산 등 국제적 노력에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가 양국간 현안을 넘어 지역적·범세계적 문제까지 그 외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일 관계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 구축을 위해 일본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간의 교류, 협력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꾸준히 취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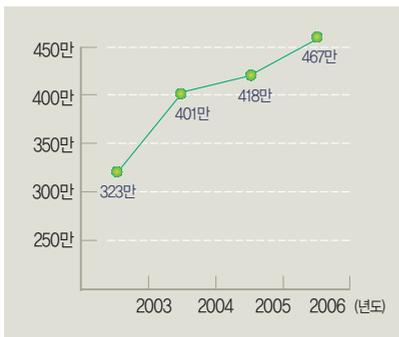
양국 정부는 2006년 3월부터 「단기사증 면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방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2003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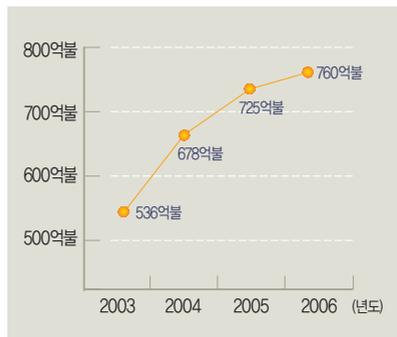
일본 주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노 대통령 (2003.6.9)

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 셔틀 항공편을 개설키로 합의하여 그 해 11월부터 매일 4편의 항공편을, 2004년 12월에는 매일 8편으로 증편 운항함으로써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 결과로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도 약 320만명에 이르던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가 2006년에는 약 470만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한·일간 인적교류 규모



한·일간 교역 규모



한편,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약 540억불이었던 교역규모가 2006년 760억불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한·일간 경제통상관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한·일 FTA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로 인하여 FTA 협상이 부진한 상태이나, 정부는 한·일 FTA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양국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2년~2005년 간 실시된 바 있는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일본과 합의하고, 2007년 6월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발족시켜 현재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불행한 과거사를 치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북관대첩비가 100년만에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봉환되었으며, 2006년 2월에는 일제시대 강제 격리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내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할린 지역의 한인 1세대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확대키로 일본과 합의하여 2007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한·중 관계

한·중 양국은 2003년 7월 국민 방중 계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래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치·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긴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간 회담시 한·중 해·공군

간 직선통신망(핫라인) 구축에 합의하는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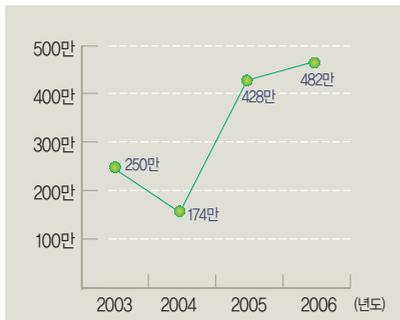
한·중간 인적 교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약 250만명 규모에서 2006년 482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양국은 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국민간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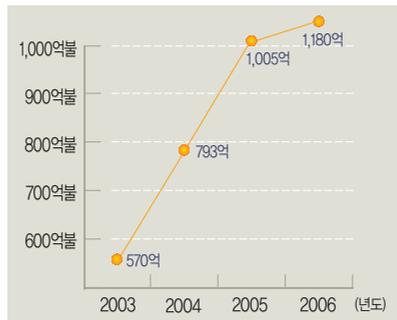
중국 국빈방문중 공식환영식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함께 3군악대를 사열하고 있는 노 대통령 (2003.7.7, 베이징)

또한, 양국 정부는 2007년 4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계기에 김포공항과 상하이 홍차오공항간 셔틀 항공편을 개설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가일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간 교류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2005년에 주청투총영사관을, 2007년에는 주시안총영사관을 개설하였고, 중국은 광주에 2007년 3월 영사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한·중간 인적교류 규모



한·중간 교역 규모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1,180억불), 수출(695억불) 흑자(210억불), 투자(178억불, 누계) 대상국이 되었고,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2005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2012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나아가간다면 교역액 2,000억불 달성 목표는 조기달성이 예상됩니다. 한편 2007년에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였고, 한·중 투자 보장협정을 개정하는 등 한·중간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 정부는 이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한·중간 「구두양해사항」 합의를 토대로 중국의 역사 왜곡 방지 및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양국 역사 관련 기관간 학술교류를 통해 역사분야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임을 감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4) 한·러 관계

참여정부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한-러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에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과 양국 실질협력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러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



한·러시아 정상회담
(2006.11.19, 하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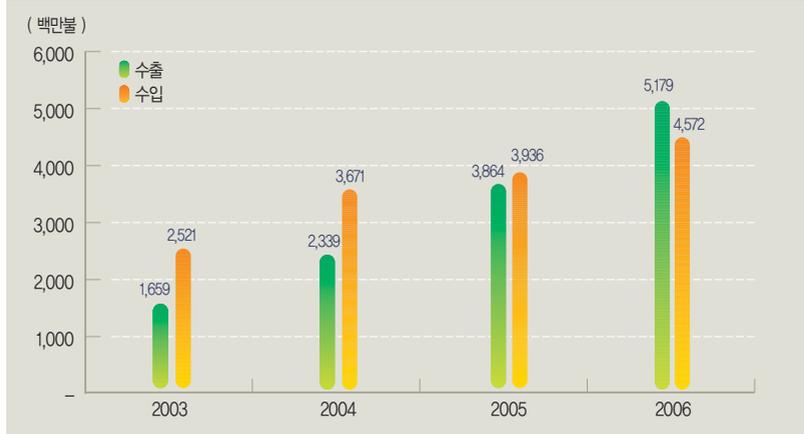
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BDA 자금문제 해결 및 대북 에너지 제공 등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러 양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실질협력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2005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부분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같은 행동계획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철도 등 물류 및 산업기술 협력 등 제반분야에 있어 양국간 실질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예정된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배출과 소형위성 발사체 사업 등을 통해 양국간 우주기술 협력은 귀중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러간 무역거래와 투자는 양국의 경제회복과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매년 40%이상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량이 2002년 32.76억불에서 2006년도 97.2억불로 3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러간 무역 및 투자는 한국의 자본과 러측의 풍부한 자원 및 기초과학 기술 등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러시아의 교역액(2003-2006)



특히 우리정부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및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회의 개최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있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한·러간 협력강화는 참여정부가 주도해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교 지평의 확대와 심화

가.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1) 정상외교의 확대

참여정부 정상외교의 추진 배경 21세기의 정상외교는 과거의 정치·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는 전문가 외교, 부처별 외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처와 국민들의 역할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국가 외교력의 총결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우리에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연하고 치밀한 정상급의 외교전략과 그 전략의 능동적인 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존경받는 선진 중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발전 △외교지평의 확대 △자원·에너지 확보 외교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정상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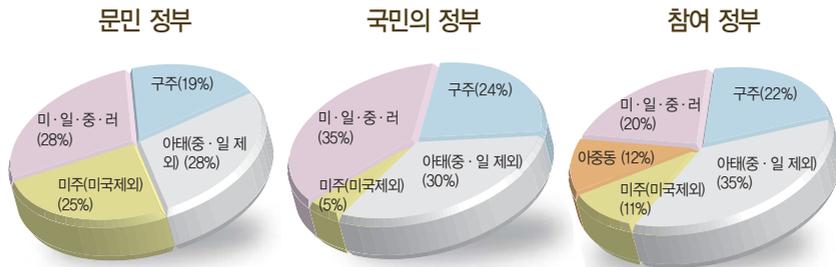
참여정부 정상외교의 성과 및 의미 이와 같은 전략과 비전하에 참여정부는 대내외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전방위 글로벌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및 기존의 전통적인 우방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지역 및 신흥경제대국 등 전세계로 정상외교의 지평을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약 5년 동안 27회에 걸쳐 44개국(유엔 포함) 순방외교를 실시한 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07년 12월말 예정 기준).

연도별 대통령 방문 국가 수



참여정부는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 대상국을 늘린다는 양적 팽창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국 정상과의 논의 영역과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라는 질적 확대에 진정한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안배와 이에 따른 전략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활발한 정상외교를 시행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정상순방외교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방문이나 실무방문이나 하는 방문의 격이나 상대측 영접자의 지위 등 절차적

인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와 목표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실리 추구 위주의 실용주의 정상외교 추진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나 관례보다는 방문하는 국가의 관례나 관행과 입장 등을 존중하는 노력을 아울러 전개함으로써, 의전 행사를 통해 양국 정상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례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실무방문을 보다 활성화하고, APEC, ASEM, ASEAN+3 및 EAS 등 각종 다자 정상회의의 계기를 활용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다수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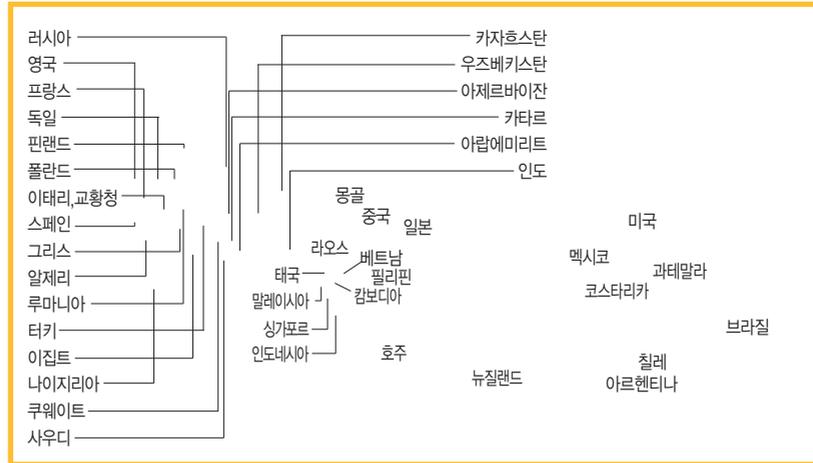
또한 참여정부하에서는 2006년 3월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및 2007년 3월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순방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은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는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 방문 이후 27년만의 우리 대통령 방문이며, 카타르는 1974년 수교 이후 우리 정상의 최초의 방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상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4일간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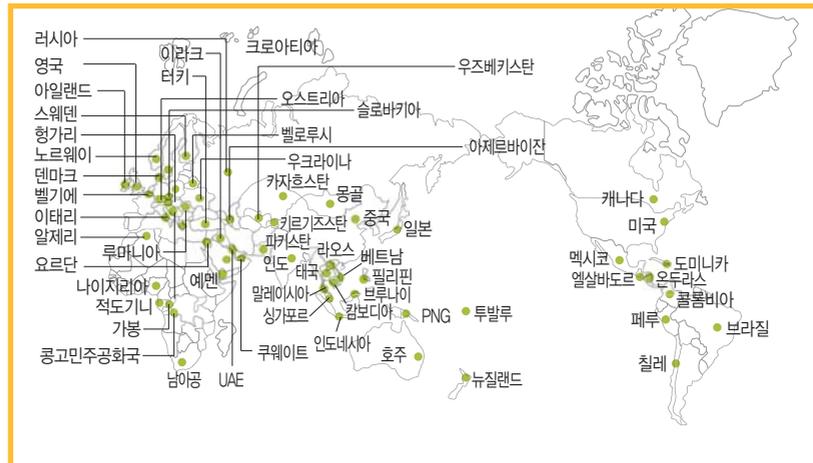
이러한 순방 외교와 더불어 참여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65회 58개국 (UN 포함) 정상급 외빈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하였습니다 (07년 12월말 예정 기준).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방한하는 외빈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빈 방한시 우리 국익 증진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상생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일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심화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국가와의 편중된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의 외교 무대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정상외교의 외연 확대 및 정상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 최고 외교관으로서 출선하는 정상의 모습을 국내외에 각인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방문 국가(2003-2007)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상급 외빈 방한국(2003-2007)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지

●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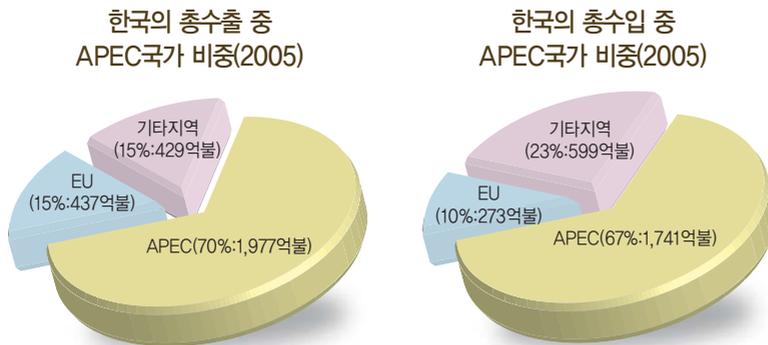
	일 자	방 문 국 가
2003	5.11-17	미국(뉴욕, 워싱턴, 상항) 방문
	6.6-9	일본 국민방문
	7.7-10	중국 국민방문
	10.6-9	ASEAN+3 정상회의(발리) 참석
	10.19-24	APEC 정상회의(방콕) 참석 및 싱가포르 국민방문
2004	9.19-23	카자흐스탄 국민방문, 러시아 공식방문
	10.4-12	인도·베트남(하노이, 호치민) 국민방문 및 ASEM 정상회의(하노이)
	11.12-23	APEC 정상회의(산티아고) 참석 및 미주(LA,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호놀룰루) 순방
	11.28-12.8	ASEAN+3 정상회의(비엔티엔) 참석, 라오스 국민방문 및 구주 3개국(영국, 폴란드, 프랑스) 순방
	12.17-18	일본(이부스키) 방문2005.10-18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국민방문
2005	5.8-12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우즈베키스탄 국민방문6.9-11미국(워싱턴) 방문
	9.8-17	멕시코, 코스타리카 국민방문 및 유엔 고위급 본회의 참석
	12.8-16	ASEAN+3 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 참석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민방문
2006	3.6-14	이집트 공식방문, 나이지리아, 알제리 국민방문
	5.7-15	몽골 국민방문,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 공식방문
	9.3-16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국민방문 및 ASEM 정상회의(헬싱키) 참석/미국(워싱턴, 상항) 방문
	10.13	중국 방문11.17-22APEC 정상회의(하노이) 참석 및 캄보디아 국민방문
	12.3-10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국민방문
2007	1.13-15	ASEAN+3, EAS 정상회의(세부) 참석
	2.11-17	스페인 국민방문 및 교황청, 이탈리아 방문
	3.24-30	중동3개국(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순방
	6.30-7.7	과테말라 IOC총회 참석 및 시애틀, 호놀룰루 방문
	9.6-10	APEC 정상회의(시드니) 참석
	11.19-22	ASEAN+3, EAS 정상회의(싱가포르) 참석

● 방한

	일자	방문국가		일자	방문국가
2003	6.2-4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2006	2.6-9	칼람 인도 대통령
	7.17-19	하워드 호주 총리		3.20-23	훈센 캄보디아 총리
	7.20	블레어 영국 총리		3.28-30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7.24-27	클락크 뉴질랜드 총리		4.5-8	메시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8.24-26	탁신 태국 총리		4.19-22	카트라이트 뉴질랜드 총독
	9.15-19	카이 베트남 총리		5.14-16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11.5-7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6.13-16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자
	11.12-14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6.29-7.1	페르난데스 도미니카 대통령
	11.24-26	엥흐바야르 몽골 총리		10.9	아베 일본 총리
	12.8-11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		10.17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2004	2.8-10	에르도안 터키 총리	10.24-26	사카 엘살바도르 대통령	
	3.9-11	페르손 스웨덴 총리	11.6-7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	
	4.15-16	체니 미국 부통령	11.22-25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7.14-16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	12.18-19	유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7.21-22	고이즈미 일본 총리	2007	4.1-4	하인쯔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
	7.24-26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4.10-11	원 자바오 중국 총리
	8.22-24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		4.11-13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2005	3.9-12	쥬르차니 헝가리 총리		4.17-19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
	3.16-20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4.23-25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3.21-25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		5.2-4	음람보-응쿠카 남아공 부통령
	4.26-27	살레 예멘 대통령		5.7-11	호콘 노르웨이 왕세자
	5.23-26	룰라 브라질 대통령	5.21-22	모하메드 UAE 총리	
	5.26-28	주린다 슬로바키아 총리	5.28-30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6.20-21	고이즈미 일본 총리	7.23-26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9.28-30	샤우카트 파키스탄 총리	8.9-13	붕고 가봉 대통령	
	10.18-19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9.3-5	산토스 콜롬비아 부통령	
	11.7-8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	10.6-11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	
	11.16	탈레도 페루 대통령	10.29-11.2	피소 슬로바키아 총리	
	11.16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11.4-6	시도르스키 벨라루시 총리1)	
	11.17	부시 미국 대통령	1.14-16	농 득 마잉 베트남 당서기장	
	11.19	푸틴 러시아 대통령	11.18-20	아탐바예브 키르기즈스탄 총리	
11.18-19	APEC 정상회의(부산) 21개 회원국 정상	11.29-30	셀랴야 온두라스 대통령 (잠정)		
			12.8-10	이엘레미아 투발루 총리 (잠정)	

(2)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참여정부는 우리의 경제·통상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적극 참여하여 APEC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21개 회원국이 소속되어 있는 APEC은 전세계 GDP의 약 56%, 교역량의 46%, 총면적의 47%, 총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경제협력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APEC 교역액은 1989년 약 930억 달러에서 2005년 약 5460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말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의 70%, 총수입의 67%, 해외투자 유입액의 62%를 APEC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5년 11월 18~19일간 부산에서 21개 APEC 전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000여명에 이르는 각국 대표단과 900여명의 역내 기업인이 참가하였으며, APEC CEO Summit(최고 경영자회의)^③ 및 APEC Investment Opportunities 2005(투자환경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골자로 하는 「부산 정상선언」 및 「부산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④ 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 관한 특별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아울러 역내 공동관심사인 테러, 조류 인플루엔

③ APEC 회원국 기업과 재계 지도자들의 APEC 활동 참여 장려를 위해 매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APEC 주최국의 기업·재계, 태평양 경제협력회(PBEC), 태평양 경제협력 위원회(PECC)의 공동주최로 일부 APEC 회원국 정상을 포함하는 민·관·학 인사를 초청하는 세미나 형식의 회의

④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문서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실현키로 한 보고르목표의 중간점검(2005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동 목표달성을 위해 APEC이 이행해야 할 작업방향을 설정

자,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및 반부패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13차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2005.11.19, 부산)



「부산로드맵」은 보고르목표 설정 이후의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을 반영하여 APEC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이정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상의 제안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연구개시에 합의함으로써,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 확산과 전지구화 과정에서 표출된 양극화 문제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나아가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PEC 최고 경영자회의에 참석한 기업인 393명이 반부패 서약에 서명, APEC 정상들에 제출함으로써 공직자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패 척결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APEC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제고되었습니다. 부산 APEC 정상회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APEC 회원국과 전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외교 다변화 · 다원화 추진

(1) 동남아 외교

참여정부는 국제 정치 ·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무, 경제 · 통상, 안보 협력 등 제반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 포괄적인 양자협력 체제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을 보완 · 지원하는 전략적 배후지라는 관점에서 ASEAN+3⁵ 및 ARF⁶ 등 기존의 안보 · 지역 협력체에 적극 참가, 이를 우리의 동북아 안보 협력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기여토록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를 통해 동아시아 협력체 형성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 기초의료서비스 제공 공조, ▲ 동아시아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 · 교육기관과의 공동 작업, ▲ 통신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access 확대를 위한 IT 공동개발, ▲ 동아시아포럼(EAF)⁷ 등 4개의 ASEAN+3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⁵ ASEAN+3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일본, 중국, 한국 등 3개국을 포함시킨 정상회의. 1967년 설립된 아세안(ASEAN)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97년부터 정상회의 개최시마다 한·중·일 정상을 초청하여 회의 개최중

⁶ ASEAN Regional Forum. 약칭 ARF.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로 아세안의 확대 외무장관회의(ASEAN PMC)를 모태로 1994년 창설

⁷ 동아시아포럼(EAF: East Asia Forum)은 ASEAN+3 국가들의 정부, 재계 및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 동아시아포럼은 2001년 11월 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시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우리측이 제안하였으며, EASG(동아시아연구그룹)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 채택됨. 2003년 12월 창립총회 서울 개최 이래 산 · 관 · 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중

10차 한 · 아세안 정상회의
(2007.1.14,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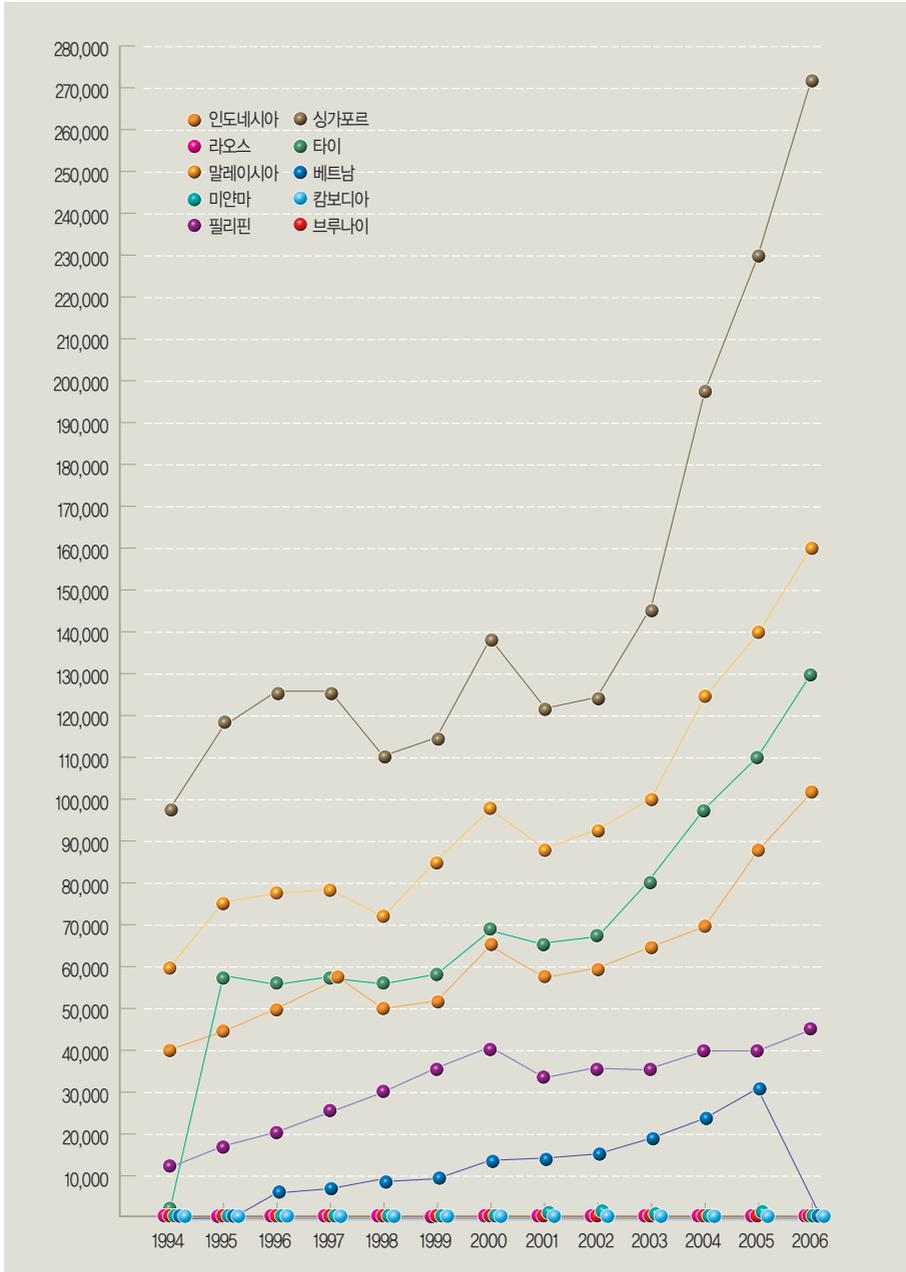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수출대상국이자 에너지 및 자원 공급처인 만큼, 양자차원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동남아시아들과는 경제협력·교역 규모 등에서 획기적인 관계증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대동남아 외교전략을 바탕으로 특정국가, 특정연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 정상외교를 추진한 것은 역내 국가들과 전반적 관계증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EAS)
(2005.12.14, 칼라룸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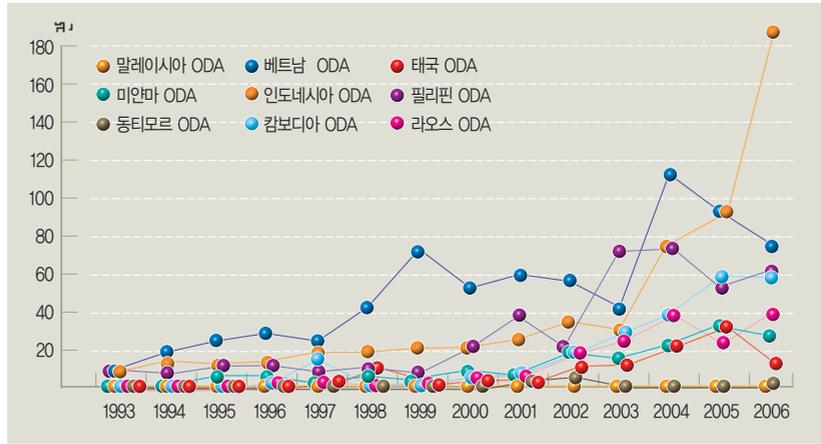
이와 같은 대동남아 외교의 다변화 및 다원화 노력을 통해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와 역할 확대를 이룩하여 대외원조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한 동남아국별 양자 협력 증진 기반 구축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달성하는 한편, 균형 있는 정상방문 외교를 실현하여 우리의 대동남아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동남아국가와의 교역추이



⑧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개발 원조 : 선진국의 공적기관(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에 의해서 개도국 및 국제 기구에 공여되는 자금을 말함

동남아 국가별 ODA^⑧ 지원추이



동남아 국가별 정상 방문횟수



(2) 서남아·대양주 외교

참여정부는 9.11 테러이후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서남아지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기존 외교의 다변화 및 외연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BRICs의 일원으로서 최근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전통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2006.2.7, 청와대)

자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물적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시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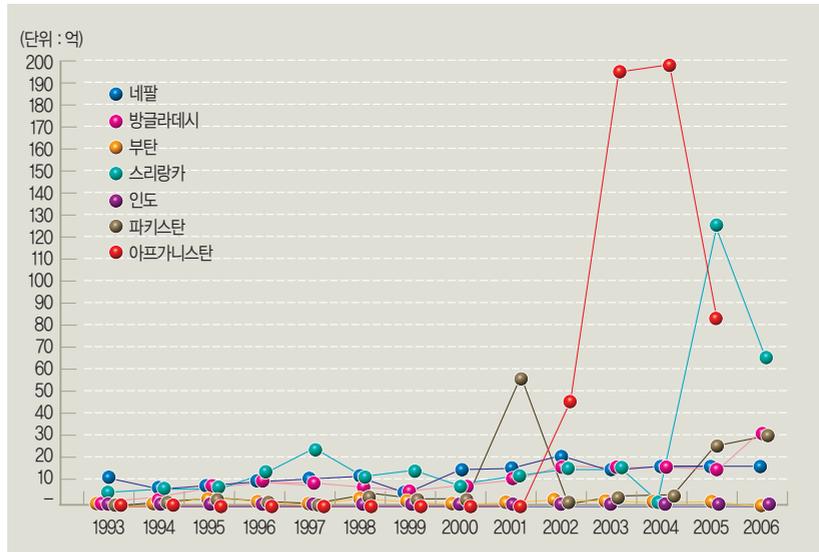
파키스탄과는 2003년 무사라프 대통령 방한 등 고위인사 교류, 2004년 제6차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특히 교역 및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어, 2003년까지 4년간 7억불 미만 수준에서 정체상태이던 교역량이 2004년 9.7억불, 2006년 10.1억불 수준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네팔,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등 기타 서남아 국가들과의 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IT, 문화, 관광 등 실질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에 대한 유무상 원조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총 5천여만

불을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의료지원단 및 공병단으로 구성된 210여명 규모의 우리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지속 주둔시켜 왔습니다.

서남아 국가별 ODA 지원 추이



한편, 참여정부는 남아시아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남아시아지역협력 연합(SAARC)에 2006년 옵저버로 가입, 2007년 제14차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SAARC 8개 회원국간 교역액은 매년 평균 22%씩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SAARC 옵저버 가입은 거대시장으로 부상하는 서남아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및 교역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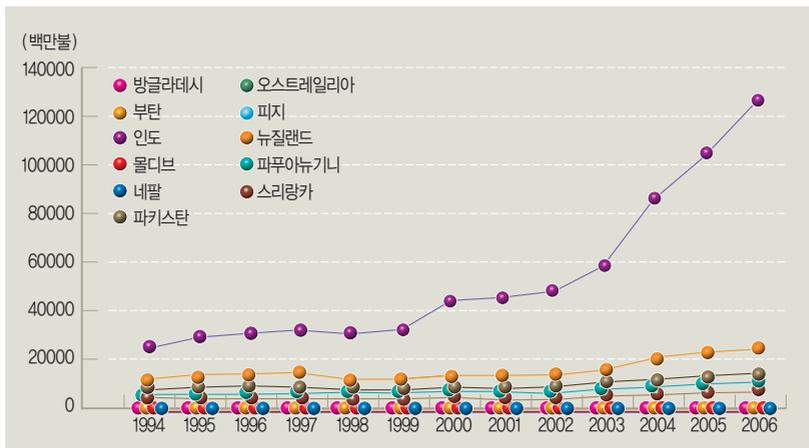
또한,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양주지역 국가들과의 제반분야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호주와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 2003년 92억불이던 양국 교역규모가 2006년 160억불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로써 2006년 호주는 한국의 제8위 교역상대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의 호주 국민방문을 통해 에너지·자원 등 제반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당시 합의한 한·호주 FTA 민간 공동연구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 당시 「21세기 동반자 관계」구축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문화·교육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호주와 마찬가지로 방문당시 합의한 한·뉴질랜드 FTA 민간 공동연구를 진행시켜 오고 있으며, 양국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에너지·광물자원을 보유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태평양 소재 16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는 대화상대국 자격으로 매년 참석, 각 회원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서남아·대양주 주요국가와의 교역(수출) 추이



(3) 유럽외교

참여정부는 출범후 기존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44차례 유럽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유럽지역과의 정상외교는 전체 정상외교 회수의 역대 최고수준인 약 31%에 달하였으며 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유럽지역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유럽간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인 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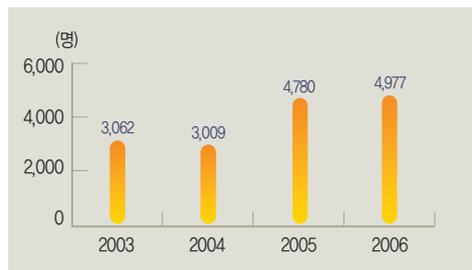
제6차 ASEM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회의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노 대통령
(2006.9.11, 헬싱키)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대한 유럽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EU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말 현재 교역 780억불, EU의 대한 투자 50억불을 기록하여

EU의 대한투자 증가 추이



EU는 현재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국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정부는 기존의 유럽과의 경제통상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서 동시에 산업기술, IT, 해운, 항만, 에너지 등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과 EU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2006년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갈릴레오 협력협정(9월)과 과학기술 협력협정 및 핵융합 협력협정(11월)이 체결되어 과학기술, 첨단 분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유럽 개별국가와의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럽국가 외에 북유럽국가, 신흥 중유럽국가와의 정치·경제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터키, 그리스 등을 최초 국민 방문하여 해운협력, 방위산업, 원자력, 관광산업 등 실질협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
(2006.9.4, 아테네)

참여정부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CIS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분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역투자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대유럽 외교 모멘텀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유럽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EU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통상과 투자를 증진하며 IT, 과학기술 등 실질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위인사 교류 강화, 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 개최를 통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계속하겠습니다.

(4) 아프리카·중동외교

참여정부는 출범 후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전례없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UAE를 방문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이래 나이지리아, 베냉, 콩고, 탄자니아, 가봉, 요르단, 이라크 등 다수 아프리카·중동 국가의 정상 방한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중 국왕 자문회의
(슈와 카운슬)에서
연설하고 있는 노대통령
(200.7.3.25, 리야드)



이를 통해 참여정부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양자간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음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UN 사무총장직 진출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6년 3월 나이지리아 국민 방문을 계기로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를 지금의 3배인 1억 달러까지 늘리고 무상원조도 획기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선언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빈곤퇴치와 함께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마지막 남은 시장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중동 외교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아프리카 31개국과 우리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2006년 11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동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콩고,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

니아, 베냉 등 5개국 정상과 27명의 각료 및 아프리카 학자 등이 방한하였습니다. 「21세기 아시아-아프리카 공동번영을 향하여」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동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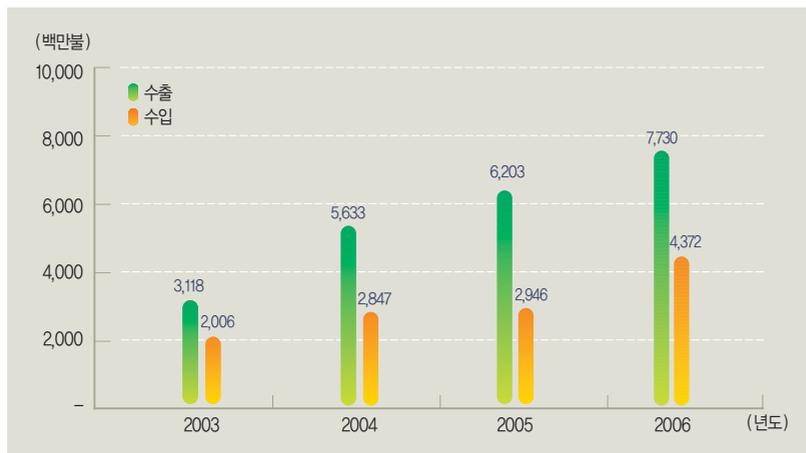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자 초청 만찬(2006.11.8,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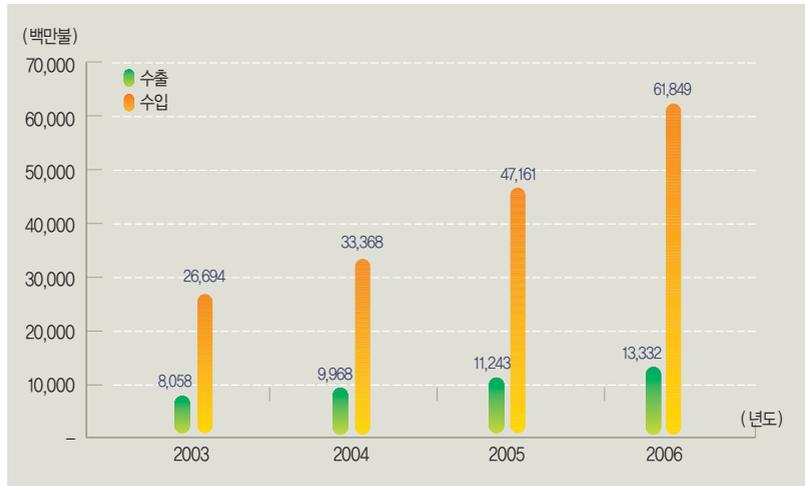
잠재력과 이의 개발을 위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간 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래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말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은 2001년 46.4억불에서 2006년 121억불로 3배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우리나라의 대중동 교역액은 총 518억불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의 총 347억불에 비해 1.5배 가량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액(2003-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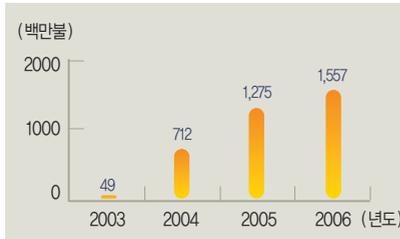
한국의 대중동 교역액(2003-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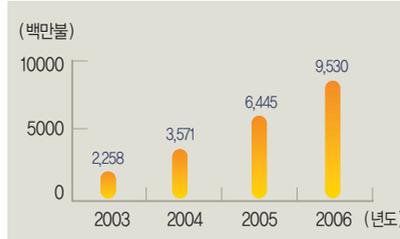
한편, 참여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에너지 자원 분야 산업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 차원은 물론, 고위인사 상호 방문시와 경제공동위, 정책협의회시에도 에너지 자원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어 왔고, 이를 통해 석유, 가스, 철광석 등 전략자원의 추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우리기업의 아프리카·중동 지역내 인프라 건설 참여 및 플랜트 수주를 적극 지원해 왔고, 그 결과 철도, 도로, 수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아프리카 수주 증가 추이



대중동 수주 증가 추이



우리 정부는 대아프리카·중동 외교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순방시 발표한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동지역간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Middle East Society의 창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고 동 지역에 대한 통상과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자원 등 실질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 중남미 외교

중남미 지역의 외교적 중요성 확대 우리의 외교 다변화 추세 및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강화 추세에 따라 중남미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우리의 전통 우방이자, 흑자기조 대상국인 중남미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적극적인 대중남미 정상외교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남미 방문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중남미 방문을 통해 대중남미 협력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남미 3개국 순방(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을 통해 이들 3국과의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 경제·통상, 자

원,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양 지역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승격시켰습니다.

폭스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 국민방문 공식환영식에서 의상대 사열을 받고 있는 노 대통령 (2005.9.5, 멕시코시티)



⑨ SICA(중미통합체제) : 중미 지역 경제통합 및 평화·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되었으며, 중미 7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파나마, 온두라스, 벨리즈) 및 도미니카공화국 회원국

2005년 9월 코스타리카(제2차 한-SICA^⑨ 정상회의 개최) 및 멕시코 국민방문시 중미 8개국 정상들과 회의를 가지고 한-중미간 호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하고, 양국간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IOC 총회 참석차 2007년 7월 과테말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투자 관계 및 개발협력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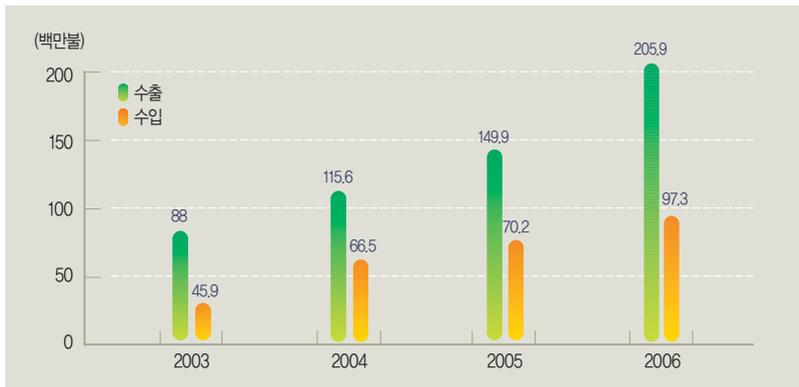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8~9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9월 9일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관계 발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자원·에너지 협력 강화, 한·페루 FTA 추진 등 양국간 통상·투자 증진, 경제·기술 협력방안(페루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최대 ODA 수원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번 한·페루 정상회담은 한국과 페루간의 깊은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남미 협력 다변화 특히 2004년 남미 순방을 통해 브라질, 아르헨티

나 등 자원 부국과의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자원공동위원회 개최 및 주아르헨티나 대사관내 「남미자원협력센터」를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전개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 상대로 칠레를 선택,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되어 대중남미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며,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와는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를 격상시켜 FTA 체결 추진에 합의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통상 관계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호주 APEC 계기 개최된 한·페루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페루 FTA 타당성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여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FTA를 통한 경제·통상 관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 중남미의 교역액(2003-2006)



중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 증진 참여정부는 중남미지역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중남미 지역기구에 가입 또는 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5년 가입 추진 25년만에 IDB(미주개발은행)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대중남미 진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고,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정책협의회 개최, 한·SICA(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및 한·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대화협의체 설립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제2차 한·SICA정상회의
(2005.9.12, 산호세)



⑩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된 지역간 협력체로서 동아시아 15개국과 중남미 18개국 등 총 33개 회원국이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작업반회의, 핵심그룹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 활동

또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간 유일한 협력체인 FEALA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⑩ 지역조정국 역할 수행, UN ECLAC(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가입, OAS(미주기구) 옵저버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중남미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중남미 외교 강화 기초를 유지하여 경제·통상, IT, 자원 등 제반 분야에서 양 지역간 우호협력관계를 적극 확대하고, 고위인사 교류 강화, 정책협의회 및 자원공동위 개최,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를 계속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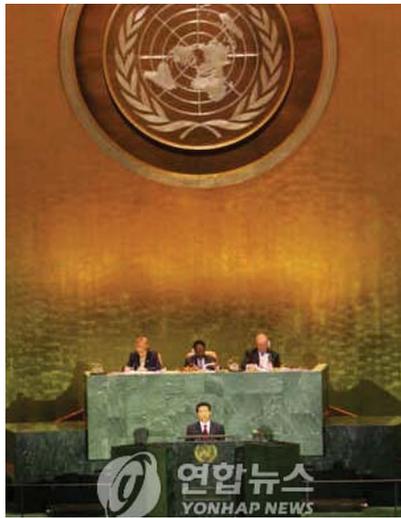
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기여

참여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의 우리 역할을 제고시키고, 군축·인권·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2005년 유엔 총회 정상급회의의 연설을 통해 유엔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기여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포괄적 유엔 개혁 이행 노력 논의 참여 및 2006년 창설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¹¹ 초대 이사국 진출,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¹² 기금,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¹³에의 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신설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유엔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여 왔습니다.

참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개혁 관련,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혁안 추진에 대응하여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고, 안보리의 대표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350명 규모의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파견하는 등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PKO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관련법 제정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국제적 기여 증대와 국가위상 제고

제60차 유엔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노 대통령
(2005.9.15, 뉴욕)

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 2006년 3월 창설 결의 채택, 47개 이사국으로 구성

②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PBC): 2005년 12월 창설 결의 채택, 임기 2년의 재선가능한 31개 국으로 구성

③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 2005년 12월 창설결의 채택, 약 5억불 상당의 상설기금 확보 목표

⑭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 결정으로 1979년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라는 명칭으로 설립, 1984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다자군축 협상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남·북한 포함 65개 회원국이 참여

⑮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 결정으로 설립되어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심층 검토하여 차기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

⑯ 1978년 주요 핵 공급 국가들로 결성되어 핵물질, 장비, 기술의 수출과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으로 구성

⑰ 1987년 미국의 주도하에 G-7이 설립한 수출통제체제로서,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의 운반 수단을 통제함으로써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 회원국으로 구성

참여정부는 군축·비확산 분야 관련, 제60차 유엔총회 1위원회의 의장국, 2006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rence on Disarmament)^⑭ 및 유엔 군축위원회(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⑮의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일원으로서, 2003년 핵 공급국 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⑯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2004년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⑰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성취해 낸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우리의 연성국력(soft power)을 적극 활용, 아시아의 선도적인 인권·민주주의 국가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등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더욱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테러리즘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 하에 범세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테러협력을 위해 UN, APEC, ARF, ASEM 등 다자차원 뿐 아니라 및 양자차원의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개도국의 대테러 역량 강화지원, ▲정보공유, ▲법집행 등의 분야에서 더욱 포괄적인 국제협력을 확대중에 있습니다.

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확대

(1) 대외원조의 지속적 증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2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에 대한 기여를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수원국 지위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UN의 천년개발목표(MDG) 등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선진공여국 클럽인 OECD-DAC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원조 체제를 구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대외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원조 규모를 2002년 2.5억불 수준에서 2006년 4.5억불 수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대외원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ODA 정책의 범정부적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외원조 활동의 기반이 될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 및 「ODA 중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원조 규모 및 향후 증액 계획^⑬



⑬ 참여정부 이후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2009년까지 GNI의 0.1% 증액, '비전 2030'을 통해 2015년까지 GNI의 0.25% 제시(2007년도 통계는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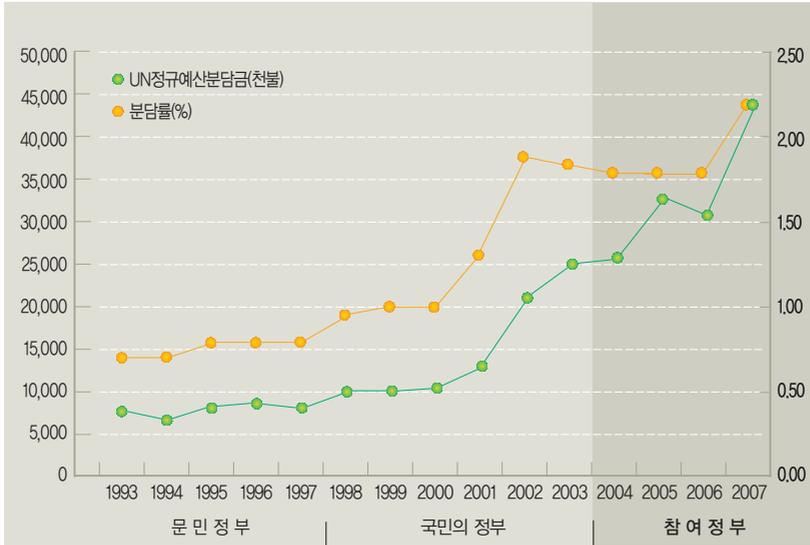
우리 정부는 우리의 대외개발원조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제고를 통해 우리 ODA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20일에 채택된 ODA 중기전략을 통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2010년까지 GNI 대비 0.109%)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확대필요성을 매년 검토할 계획입니다. ODA 중기전략에 따라 유상원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무상원조 중심의 증액을 통해 무상비율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ODA 유형을 선진화하는 데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6년 6월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에서 구축하기로 결정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유무상 ODA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우리 ODA의 언타이드화와 국제 ODA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개발원조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 국제기구 분담금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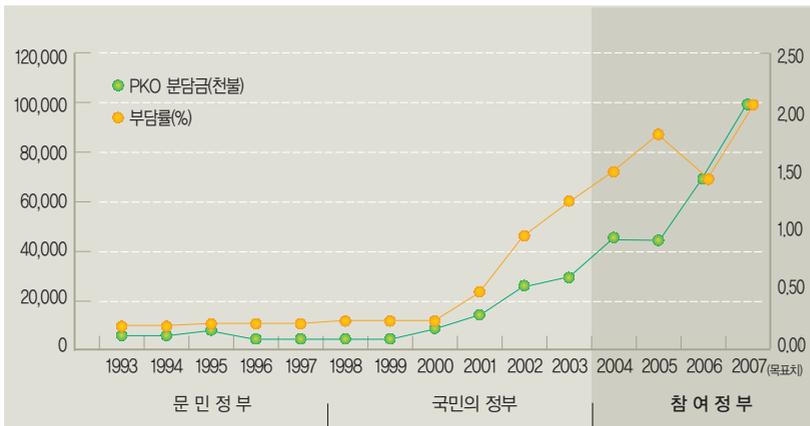
참여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역량에 걸맞는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유엔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부각시키고 향후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신장된 국가 경제력에 따라 2001년 당시 각각 1,300만불, 500만불에 불과했던 우리의 유엔분담금 및 PKO 분담금은 2006년 3,000만불, 6,900만불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7년에 누적 체납액을 완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국가신뢰도 제고 및 우리의 유엔 내 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PKO 분담금



다. 국제 주요기구 진출

참여정부는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및 각종 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외교를 비롯한 적극적 외교 교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0월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되고,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고등판무관을 배출하는 등 고위직 진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무총장 배출은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
취임선서
(2006.12.14,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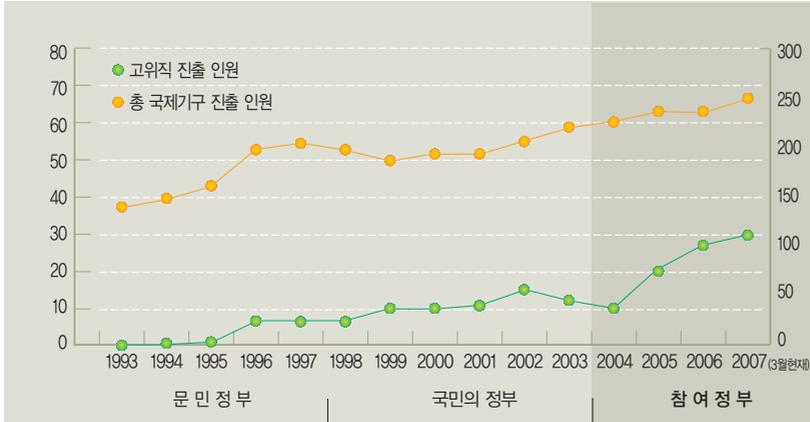


⑩ 해당국가의 비용부담하에 국제기구에 1~2년간 수습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규 직원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초대 이사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 등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사회에의 기여 및 영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참여정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제도^⑩ 시행, 국제기구인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2007년 7월 현재 총 41개 국제기구에서 246명이 활동중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 전개

참여정부는 세계적인 경제규모,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 있는 문화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양 측면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문화외교 활동의 내용면에서도 공연, 미술, 영상, 학술, 스포츠, 청소년, 관광, 지자체 교류 등 전방위적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방향적인 문화전파에서 벗어나 외국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국민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문화간 대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우수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등 문화관련 국제기구의 글로벌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문화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현재까지 8개 국가와 새로이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총 29건의 문화공동위(또는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협력 증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공동위 개최 실적

단위: 개최회수

지역	문화협정 체결		문화공동위 개최	
	1998.3~ 2003.2	2003.3~ 현재	1998.3~ 2003.2	2003.3~ 현재
아주	1	3	10	9
미주	-	-	3	4
구주	1	1	9	7
아중동	3	3	6	9
합계	5	5	28	29

※ 협정의 경우, 서명국 기준

아울러 한·일 우정의 해(2005), 한·영 상호방문의 해(2006-2007), 한·불 수교 120주년 사업(2006), 한·터키 수교 50주년, 한·중 상호교류의 해,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행사(2007) 등 주요 국가와의 외교적 계기를 활용한 종합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자협력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유네스코 등 문화관련 국제기구에 참여,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5년 제15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국(2006-2009년)으로 선출된데 이어, 금년 제3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2007-2011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불법소유문화재 반환촉진 위원회(ICPRCP, 2005~2009년), 국제 교육국 위원회(IBE, 2005-2009) 등 총회산하 4개의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 불법문화재 반환 등 문화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 2005년에는 우리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Register)으로 각각 등재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총 168개국에 민간예술 공연단을 파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공연단 파견은 지역별, 국가별 문화 교류 수요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공연예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단체 선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연 사후평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연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연중인
다스름 공연단
(2007.9.14)

체육외교와 관련, 주요 국제대회 유치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 유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각종 국제대회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에 대구가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동시에 참여 정부는 국제대회 유치 중심의 체육외교에서 탈피하여 유치·준비·개최 등 국제경기의 모든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체육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인프라의 체계적 정비 및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 추진 현황

	파견국가	공연단	비 고
2003년	26개국	17개 공연단	한·EU 수교 40주년, 한·캐나다 수교 40주년, 한·페루 수교 40주년 기념 등
2004년	29개국	20개 공연단	한·네팔 수교 30주년, 한·우루과이 수교 40주년 기념 등
2005년	34개국	26개 공연단	한·싱가포르 수교 30주년, 한·베네수엘라 수교 40주년,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제 등
2006년	44개국	24개 공연단	한·불 수교 120주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핀란드 ASEM 정상회의 등
2007년(예정)	35개국	17개 공연단	ASEAN+3 정상회의, 한·스리랑카 수교 30주년, 슬로바키아 등 신규창설 공관지원 등

우리정부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를 아프리카, 중남미 및 중동 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2006년 이래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9월 서울과 창원에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동아시아 영화교류전' 과 「동아시아 공연예술제」 등 동아시아지역 국가간 최초의 종합적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2007년 10월에는 한중일 3국간 문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중·일 문화서틀사업」의 1차 사업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계기에 「한·중·일 영화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오는 12월 19~21일에는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아프리카 문화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확정 후기뻐하는
우리 대표단
(2007.4.17, 쿠웨이트시티)

또한 우리 정부는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을 통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71개 재외공관에 588점의 미술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재국들이 우리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희망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아트갤러리(www.cyberartgallery.co.kr)」를 2007년 8월 외교부 홈페이지에 개관함으로써, 외교부가 소장한 우수 미술품을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이버아트 갤러리」에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 중 주요작품 30점을 선정, 간단한 작품 설명 및 작가 약력을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미술품을 교체, 전시할 예정입니다.



사이버아트갤러리(www.cyberartgallery.co.kr)

4.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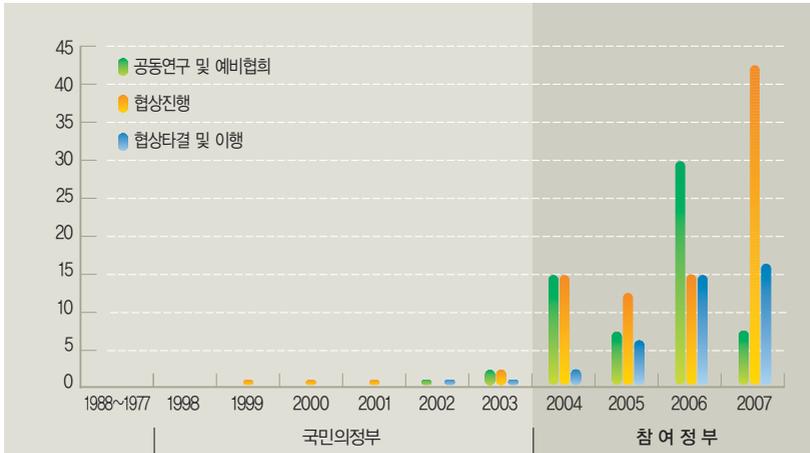
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 추진 98년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경제성장률의 하락, 노령화, 청년 실업 등 성장 잠재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대외적으로 DDA 협상의 부진과 주요 경쟁국들의 경쟁적 FTA 체결이 우리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 시장의 확보와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주요 대륙별 거점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경험과 자신감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제5대 수출시장인 ASEAN과 FTA(기본협정·상품분야)를 타결·발효(2007.6) 시키는가 하면, 세계 최대 시장중 하나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2007년 4월 타결하여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참여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통해 조성된 국민의 개방 마인드를 유지하며, 우리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인 EU와의 FTA 협상을 2007년 5월 출범시켰습니다. EU와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가 유럽-아시아-미국을 잇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및 한·미 FTA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북간 왕래 인원 현황



기체결된 FTA는 이미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된 이후, 휴대폰, 칼라TV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일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하는 등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현황



한-일간 칠레 시장점유율



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그 밖에 한·싱가포르 FTA(2006.3) 및 한·EFTA FTA(2006.9)도 발효 후 각각 양자간 교역·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ASEAN과는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진행중이며, 미주대륙의 거점 시장인 캐나다와 멕시코, 서남아지역의 경제허브로서 급성장하는 거대 소비시장인 인도와도 FTA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남미 최대시장인 MERCOSUR^⑮와는 정부간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협상 출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최대의 경제 협력체이자 자원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GCC^⑯와도 FTA 협상 출범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의 제1위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 FTA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FTA 정책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통상 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능동적 참여

참여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DDA 협상은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등 총 9개 분야의 협상 의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당초 DDA 협상은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관세 인하 및 보조금 감축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대립으로 쉽사리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결렬되자 DDA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다자무역체제의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는 우

리나라는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 규범 강화가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판단하에 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공산품 관세인하 방식으로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과감한 관세감축 방식인 「스위스 공식」을 지지한다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WTO 차원에서 「스위스 공식」이 대세로 굳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DDA 협상에서 「스위스 공식」이 채택될 경우 자동차, 휴대폰, LCD TV 등 공산품이 주력 수출 상품인 우리나라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차원에서 DDA 특별성명 채택을 주도하여 그해 12월 개최된 홍콩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성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APEC 정상회의시마다 DDA 특별성명이 채택되는 전례를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홍콩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협상 의장직을 수입하여 동 분야에서의 협상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7년 7월 WTO DDA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장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은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분야에서 미국, EU 및 주요 개도국들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06년 7월 협상이 일시중단(suspension)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DDA 협상 중단이 장기화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판단하에 각종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DDA 협상 재개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2007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DDA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협상을 본격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DDA 협상 재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다수의 제안서 제출 및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그룹 형성 등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7월 17일 배포된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의장의 협상세부원칙(modalities)초안²⁰에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은 2007년 말까지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등 각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까지 농업 보조금 감축, 관세인하 등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한 타협안이 만들어질 경우 2008년 상반기중 DDA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DDA 협상의 조속하고도 성공적인 타결이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시장 확대와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다는 판단하에 DDA 협상에 우리 핵심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²⁰ 세부원칙(modalities):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 공식, 보조금 감축 수준 등을 포함한 협상 세부원칙. 이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국별 시장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작성, 제출

다.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

참여정부 출범이후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부과 등)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인 2003년 우

리나라는 8개국에서 130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었고 2004년 13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121건, 2006년 111건, 2007년 9월 현재 109건으로 매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국이 미국, EU, 호주 등에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으로까지 확대되어 수입규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의 남발을 막기 위해 2000년 9월 외교통상부에 설립된 수입규제대책반 활동을 강화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입규제 대책반은 우리 공관을 통해 수입규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대응을 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인도, 미국, 호주, EU 등 주요 수입규제국 조사당국과 양자협의를 가지고 과도한 수입규제조치를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있는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중 2005년 5월부터 문제가 되어온 EU의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조사케이스는 업계의 대응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양자교섭 및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어진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규제건수 추이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EU시장점유율^㉑ 1위인 우리 기업들의 양문형 냉장고 및 3도어 냉장고가 반덤핑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일부 양문형 냉장고의 확정관세율(각각 3.4%, 12.2%)이 잠정관세율(각각 9.1%, 14.3%)보다 대폭 감소됨으로써 매년 약 5억불에 달하는 유럽시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남발과 부당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입규제 발동 수 감소, 수입규제의 조기 종결 및 완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라.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및 환경외교 추진

에너지·자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환경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산유국의 정정 불안 지속,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에너지 수요 급증,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자원국유화 경향의 대두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내 에너지 안보 환경은 경제성장·인구증가에 따른 지속적 에너지 수요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로 인해 그 취약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시대별 유가변동 추이^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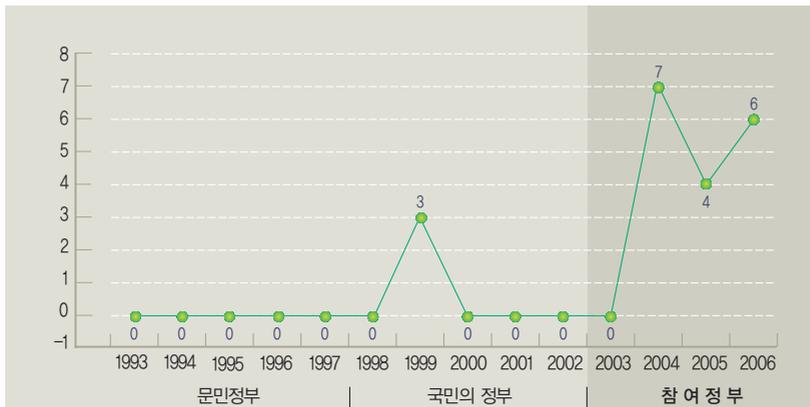
㉑ 우리업체 EU시장 수출액: 2005년 수출액 4.9억불(EU 시장점유율 18.5%), 2006년 4.3억불(EU 시장점유율 15.8%)

㉒ 유가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90/b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 핵 문제 악화시에는 \$100-\$150/b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대내·외적 에너지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 에너지 안보 관련 국제적 협조 체제의 구축 등을 에너지 외교의 주요 목표로 삼고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자원정상외교의 적극적 추진, 에너지·자원 거점공관(32개)의 설치 및 자원협력위의 운영(총 25개) 등을 통해 자원부국과의 포괄적·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에너지 자주개발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 지도자의 의사결정(Top-Down)이 중요한 아중동·중앙아시아 자원부국과의 자원 정상외교(17개국을 23회 순방, 2006년말 기준)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석유, 가스, 철광석, 우라늄 등의 신규광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상방문 국가수



한편,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신재생·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안보 관련 국제적 협조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의체 설립 논의를 주도하였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APEC,

ASEAN+3, ASEM, ACD 등에서의 에너지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및 고유가 경향 등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의 뒷받침을 위한 에너지 안보외교의 강화를 경제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 외교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 참여정부 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는 동북아 역내에서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내실을 기하고, 범세계적으로는 주요 환경협약에 가입,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및 기후변화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를 통해 환경분야에서의 그간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 한·일, 한·러 양자간 환경협력공동위의 개최를 통해 역내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NOWPAP), 동북아환경 협력 계획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NEASPEC) 등 다자 환경협력체를 통한 해양오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등 분야 다자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역내 유일의 다자간 해양환경보전 협력체인 NOWPAP의 공동사무국을 2004년 부산에 유치하여 해양분야 환경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2007년 3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황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합의를 도출하여 3국간 국장급 황사대책회의 정례개최 및 황사 공동연구단을 발족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2007년 6월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3국간 국장급 기후변화 정책대화도 개최되어 기후변화체제 형성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환경협력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NEASPEC, NOWPAP,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등 다자간 협력채널과 지구

환경금융(GEF),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금을 활용하여 남북 환경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기간중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협약(2004년2월 발효)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5월 발효)에 가입하여 유해 화학물질로 부터 환경 및 인체를 보호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2008년1월 발효)에 가입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으로부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UNESCAP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2005 유엔 아·태환경과 개발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학수 UNESCAP사무총장 (2005.3.28, 서울)

였으며, 2008년에는 국제습지보호협약(람사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하여 습지보호 분야 국제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 4년 임기의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에 51년만에 처음 진출함으로써 기상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UN CSD)에도 이사국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1월 교토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Post-2012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그 경제적 위상

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01년 이래 매년 OECD, IEA 등 전문가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국 기후협상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여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의 경제, 사회에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한 바, 우리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참가횟수



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구축

해외여행객 1,200만명 시대의 도래와 해외진출 업체, 선교사, NGO 등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외사건사고 피해건수도 함께 급증하여 왔습니다. 2001년 554건에 머물렀던 해외사건사고 건수는 2005년 4,235건을 기록,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인천공항 캠페인을 하고있는 외교통상부 직원들

외교부는 영사분야 혁신 없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제한된 예산 및 인력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재외국민보호 프로그램들을 도입·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개별 혁신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부내 혁신활동 및 의견수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개념으로 통합·연계하여 「통합영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외교부 통합영사서비스 】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변화된 영사환경과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코자 세계 외교부 최초로 영사콜센터(2005년 4월) 개설, 신속대응팀 구성(2005년 5월), 해외위급문자(SMS) 서비스 제공(2005년 5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도입(2007년 6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왔습니다.

영사콜센터 개설 1년간의 임시운영을 거쳐 2005년 4월 1일 정식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해외사건사고 및 일반 영사민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부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개소 당시 월 1천 건에 머무르던 전화상담 건수는 2007년 10월 현재 월평균 2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에 한국능률협회 소비자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정부기관 콜센터 중 1위(공공기관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사건·사고 관련 안전정보를 전파하여 해외에서의 신변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해외여행 및 영사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를 개설·운영중이며, 현재 월 평균 5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 구성 신속대응팀은 해외에서 대규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7년 1월 및 5월 나이지리아에서의 대우건설 직원 피랍사건 발생에 따른 현지 석방협상 지원 뿐만 아니라 FTA 원정시위, 독일 월드컵, 아프간 평화행사 등 사건사고 예방차원의 활동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휴대폰 국제로밍을 이용한 해외위급문자서비스(SMS) 제공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안전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SKT 국제로밍서비스 가입자에게 문자메세지(SMS)를 제공하여 왔고, 2007년 1월부터 KTF 국제로밍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도착하면 위급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 지금까지 태국 쿠데타 발생(2006년9월), 인도네시아 쓰나미 경보(2007년2월 및 3월), 미국 버지니아 총기난사사건 신변유의(2007년4월) 등 연간 12회 정도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영사협력원 제도 도입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공관 미상주 지역의 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사협력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공관이 없는 100여개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임명하여, 해외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의 지시에 따라 초동대응 등 영사보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거점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안전대책 마련 2007년 1월 나이지리아 대우직원 피랍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위험지역 진출 건설업체의 테러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정부부처 점검단을 4회에 걸쳐 파견하였습니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체별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하였고, 나이지리아 진출 건설업체 안전지원을 위해 건교관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양어선 다수 진출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견기간	점 검 지 역
1차 점검단	필리핀, 이란 (2007.2.5-2.16)
2차 점검단	점검단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2007.2.21-3.7)
3차 점검단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2007.3.20-3.31)
4차 점검단	단태국, 사우디, 알제리(2007.4.5-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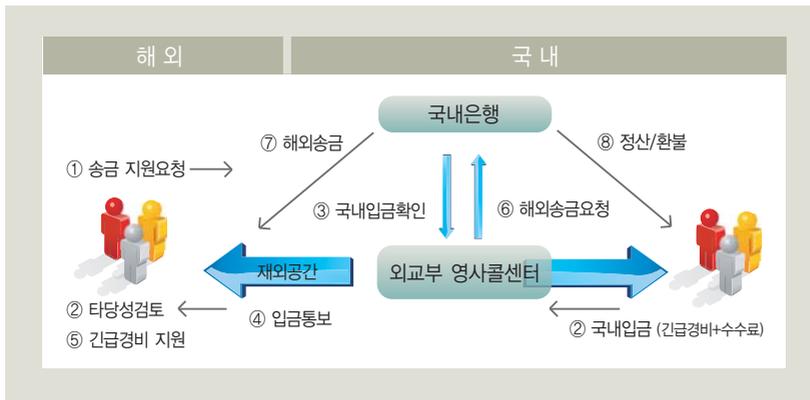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도입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으로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연고자를 통하여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은행구좌에 입금 즉

시 재외공관에서 여행자에게 긴급 경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교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해외송금 관련 기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외교통상부는 '외교도 서비스' 라는 인식하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영사콜센터 개설, 신속대응팀 구성,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신속 해외송금지원 제도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영사협력원 및 영사행정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절차도



또한, 사건발생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측면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여행홍보, 인터넷 포털과의 홍보 관련 제휴 추진, 안전여행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여행(체류) 중인 우리국민에 대한 안전여행정보 제공 및 유사시 연락망 확보를 통한 신속한 보호활동 전개 등을 위해 「해외여행객 등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기존의 여타 프로그램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통합영사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나.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재외동포의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외동포사회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외동포는 모국과 동포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우리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현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참여정부는 ‘현지화’와 함께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재외동포현황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외국국적동포	3,567,792	3,782,773	4,047,934
재외국민	2,769,159	2,855,565	2,996,782
총계	6,336,951	6,638,338	7,044,716

‘세계한인의 날’ 제정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에 따라 2007년 5월 국내외 관련 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제정,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각종 재외동포 관련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활성화 및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참여정부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동포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입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외동포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2007.10.5, COEX)

중국, 러시아·CIS 지역 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 참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의 지원 체제에서 벗어나 그간 재외동포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국, 러시아·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모국 방문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 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사업, 고려인 국적회복 지원, 영농기술 보급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민족교육 및 한민족 정체성 강화 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 및 국외입양 동포의 민족교육과 한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설립, 한글학교 교재 및 기자재 보급, 교사 연수, 사이버 한국어강좌 개설, 한국어 교재 개발, 차세대 동포 모국 유학, IT 연수, 장학금 지원, 국외입양인 동포 고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 전 세계 700만 동포 그리고 각국 재외동포를 서로 연결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korean.net은 이미 109,080건의 재외동포 관련 DB를 구축,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촉

진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고, 한민족 IT 네트워크,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세계 한인무역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로 특화되고 전문 재외동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국가수	103개국	107개국	109개국
학교수	2,032개교	2,072개교	2,052개교
학생수	119,056명	124,812명	126,746명
지원액	3,463,237원	3,752,876원	4,260,230원

화된 정책, 동포사회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각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국회, 학계, 언론, NGO 등과 협의하여 국민과 재외동포간의 호혜적 관계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 국민과의 대화 확대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2007.10.31, 부산BEX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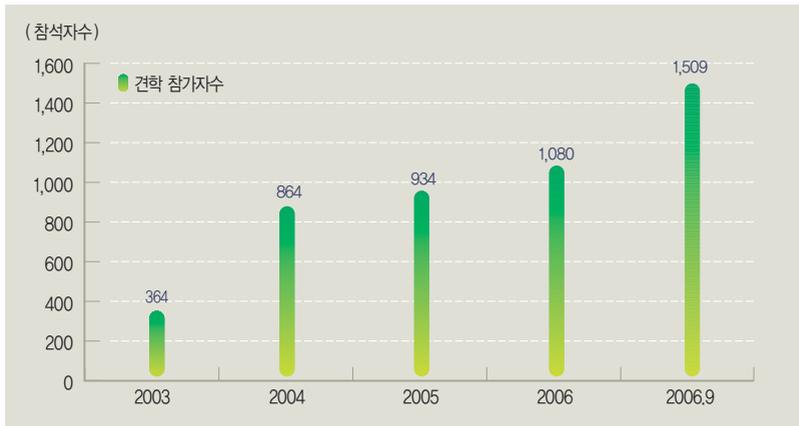


참여정부는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대국민 직접대화 활동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외교통상부 견학, 학교방문 강연, 지방순회 강연회 등 대국민 직접 접촉활동(Public Outreach)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참여 의욕을 제고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북핵문제, FTA(자유무역협정), 영사서비스 등 외교통상 분야의 주요정책과 관심이슈를 담은 뉴스레터, 정책메일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

외교부 견학 참가자 수 추이



키고,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외교통상부 정책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정책 메일의 개봉률을 향상시키는 등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교통상 사안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신속히 게재함

외교통상부
 견학프로그램 참가자들
 (2007.7.19, 외교부 청사)



으로써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일반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텍스트 위주로 재구성하여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접속속도를 개선하고, 웹 접근성과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 143개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운영, 해외홍보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연도별 메일발송 건수

년 도	2005년	2006년	2007년
메일 발송건수	총 94건	총 96건	총 85건(10.2기준)

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사서비스(www. 0404.go.kr), 자유무역협정(www. fta.go.kr), 국제기구채용정보(www. unrecruit.org) 공적개발원조(www.odakorea.go.kr) 등 외교통상부의 주요 업무별 특수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다각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사안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더 나아가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렴된 국민 여론을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